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2018. 7.

《 목 차 》

I.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2
2.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3
3.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기업 확대 5
4.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 6
5.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8

II. 노동시장 제도 개선

1.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12
2. 업종별·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기간 연장 13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5
4.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 16

III.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20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23
3.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25
4.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27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범위 개선 29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32

IV.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전속고발제 폐지 신중 검토 36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38
3.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완화 40
4.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중 검토 42
5.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중 검토 44

V.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48
2.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재고	50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52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중 검토	54
5. 서면·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56
6.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58
7. 적대적 M&A 방어 장치 도입	60

VI.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64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개선	66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 방식 개선	69
4. 가업승계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71
5. 중소·중견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73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현 황

- 국회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발의보다 의원 발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법률안 발의 현황>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총 계	2,507건	7,489건	13,913건	17,822건	9,829건
의원발의안	1,912건	6,387건	12,220건	16,729건	9,497건
정부발의안	595건	1,102건	1,693건	1,093건	332건

* 의안정보시스템('18.6월말 기준)

☐ 문제점

- 규제는 경제주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정부발의와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이 과정이 없어 우회입법 창구로 남용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나,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음

☐ 건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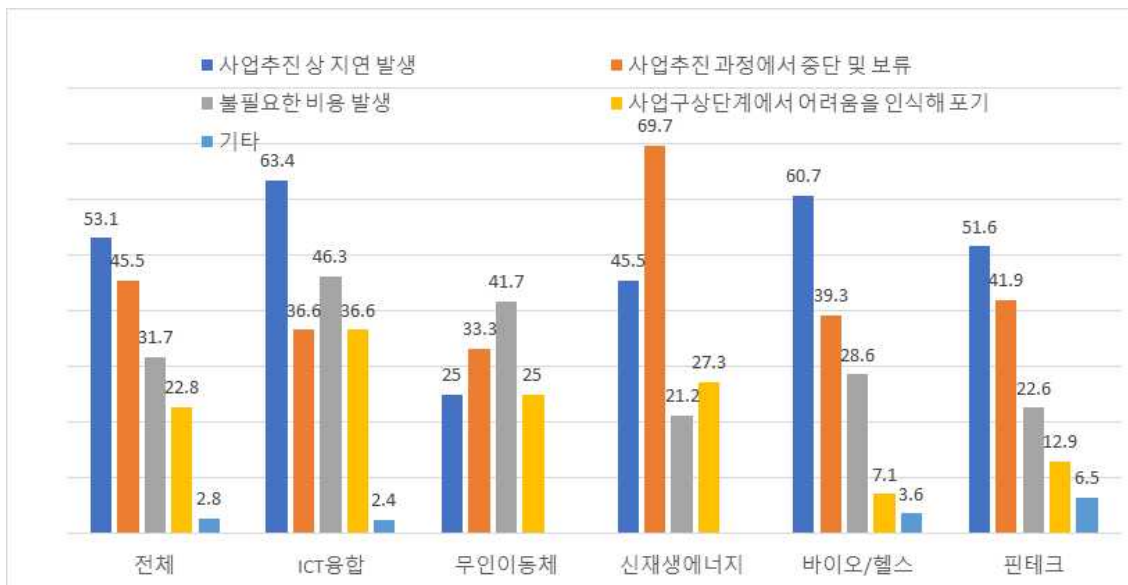
- 의원 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 개선

2.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신제품 발전 및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신산업분야 기업의 53%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차질을 빚었고, 45.5%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 및 보류한 것으로 조사됨

<신산업 분야별 사업차질 유형>



*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 '17.6.2

-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음

* 혁신적 신제품 서비스의 시장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신제품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도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법안명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민병두 의원, 2017.3.6.)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민병두 의원, 2017.3.6.)	금융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홍익표 의원, 2017.3.6.)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신경민 의원, 2017.3.7.)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경수 의원, 2017.3.15.)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건의내용

-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3.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기업 확대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현황 및 문제점

- 주력산업 위기 등에 대응하여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이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중('16.8.13~'19.8.12)이며, '18.6월 현재 83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 추진 중

* 적용 제외 : ① 「기촉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③ 파산신청기업, ④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기업규모별 사업재편 승인 현황>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승인건수	66건	10건	7건	83건
비율	79.5%	12.1%	8.4%	100%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18.6.26 기준)

- 그러나,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만 한정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한계기업 수준의 기업만 제도 활용에 적극적
- 과잉공급 업종 외에 다양한 업종에 사업재편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기업활력 및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법 목적 달성에 제한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인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함

☐ 건의내용

-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3년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4.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17.11.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1.1 시행)

구 분	요건 및 내용	관련 법령
피인수 중소·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요건(매출액 등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충족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인수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변경내용	·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기간 확대 : 3년 → 7년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기간과 동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삭제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위 7년간 유지된다, '17.12.29

-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시 7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반면, 중견기업 피인수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3년간만 부여하고 있어 역차별 발생
- 피인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세제·금융·판로 등 각종 지원이 축소되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유인이 부족하며, 인수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수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산업 창출 및 M&A 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실효성 제고 및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피인수 중소기업에 대해 7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5.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중견기업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없음

☐ 문제점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기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여 중견기업의 투자지연 및 포기, 해외공장 설립 사례가 속출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첨단업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 가능(첨부 표 참조)

* 수도권 공장 등록 중견기업은 511개사가 828개 공장 등록('15.10월말 기준)

-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도 공장 신설로 규제하여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 공장 신설시 증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역량 분산, 물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기업경쟁력 상실 우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 건의내용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산집법령상 수도권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공장설립 규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중소	중견	중소	중견	중소	중견
산업 단지	공장 신·증설	좌동	공장 신·증설	좌동	공업·기타지역 허용행위 (면적제한 없음)	면적제한
공업 지역	도시형공장 신·증설	X	제한없음	과밀·자연⇒성장권역 이전 첨단업종 기존공장증설 기타지역 허용행위	3천㎡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X
	기존공장 증설	3천㎡이내, 첨단업종 200%이내			기타⇒공업지역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X
	기존공장 부지 내 증설	좌동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기타⇒공업지역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X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기타 지역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의 신·증설 또는 기존공장 증설	1천㎡이내, 첨단업종 기존공장 100%이내	제한없음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 공장 신·증설(5천㎡이내) 첨단업종 기존공장 200%이내 증설 기존공장 증설(3천㎡이내)	1천㎡이내 현지근린·첨단업종· 건축자재업종 신·증설 또는 기존공장 증설	좌동
	도시형공장 증설	X			1천㎡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X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신·증설	1천㎡이내			3천㎡이내 기존 도시형공장 증설	X
	기존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X	과밀·자연 ⇒성장권역 이전	X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X
	해당지역 신설 허용업종 영위 위한 기존공장 증설	좌동			폐업공장 양수 동일규모 공장 신설	X
					해당지역 신설 허용업종 영위 위한 기존공장 증설	좌동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신·증설	좌동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93.7.1 당시 등록된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존공장 증설 허가 가능
- 성장관리권역 :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100% 범위 증설이고 증설면적이 3천㎡ 넘지 않을 것
 - 자연보전권역 : 성장관리권역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비(非)배출 공장으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 이하이고, 증설면적 1천㎡ 넘지 않을 것

노동시장 제도 개선

1.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3개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면 2주일 내에서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나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 미국, 프랑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년이며, 독일은 기본 6개월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중

☐ 건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수정 필요

현행	개정안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생략)-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1개월</u>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생략)-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생략)-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u>12개월</u>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생략)-

2. 업종별·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기간 연장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53조

☐ 현황 및 문제점

- 업종별·지역별에 따라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함
- 고용노동부의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18.4월)”에 따르면 제조업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6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1위로 조사됨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농림업	광업	제조업	전가수	기스도	하폐기물경	수건설업	도소매	운수업	숙음점	박식업	출판상	금용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화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총 실근로시간*	166.3	193.9	188.8	179.8	184.6	143.5	170.1	178.2	144.2	167.7	169.6	183.1	168.5	169.8	139.8	166.2	148.8	157.8		
소정 실근로시간	161.6	172.9	167.2	169.0	170.3	139.9	165.5	164.7	140.8	162.0	165.3	180.6	164.4	161.4	137.3	160.6	142.6	154.3		
초과 근로시간	4.7	21	21.6	10.8	14.3	3.6	4.6	13.5	3.4	5.7	4.6	2.5	4.1	8.4	2.5	5.6	6.2	3.5		

* 총 실근로시간 = 소정 실근로시간 + 초과 근로시간

- 제조업의 경우,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공장 대지 매입, 공장 신축, 설비 도입 및 가동), 근무관리 시스템 수정(2조 2교대 → 3조 3교대 전환) 및 인력 충원, 노사협의 등 타업종 대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므로 타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소재 중견기업들은 인력수급 문제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계약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

※ (사례N사)

- N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견기업으로 현재 2조 2교대로 사업체 운영 중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3조3교대 운영으로 시스템 전환 중이며, 이를 위하여 160여 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
- '18.1월~6월 116명의 근로자를 채용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감소(2교대 대비 개인별 급여 25%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113명이 퇴사하거나 인근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직
- 청년층의 생산직 기피 성향과 기업체 수에 대비하여 부족한 중장년층의 노동 인력 때문에 신규채용 및 숙련공 채용 모두 어려운 상황임
- * 2016인구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양주시 생산가능인구는 139,600명에 불과한데 N사 소재 시내 4,000개가 넘는 제조업 사업체가 운영 중

□ 건의내용

- 업종별·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기간의 유연한 적용 및 확대
 - 업종별 초과근로시간 실태 및 근로시간 단축 대응 현황을 고려하여 제도기간 차등 적용
 -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사업체 현황 등을 반영하여 구인난 심화 지역을 선정하고 제도기간 연장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문제점

- 제조업은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으로 제한받고 있음
- 중견기업의 상당수가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고용이 불가함

*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요건과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 가능

☐ 건의내용

- (제1안) 구인난이 가장 두드러지는 뿌리산업 및 섬유 업종의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 외국인 고용 예외적 허용
- (제2안) 제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외국인고용허가의 유예기간(3년간) 도입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제도 :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납품실적 보유+매출액 2천억원 미만'일 경우 3년간 추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허용(판로지원법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4.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정의하고 각종 고용 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적으로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확대 필요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특별법, 공정거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 매출액,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혼선을 초래

☐ 건의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포함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현 황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이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에 대해 세제 지원
 - (중소기업)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 법인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 **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 제2호 라목,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50%, 중견기업 근로자 소득세 30% 감면*(‘18.12.31까지)
- * 조특법 제29조의6, 동법시행령 제26조의6

☐ 문제점

- 중견기업의 재직연수 5년 미만 근로자 비중은 55.7%*로 중소기업 (65.5%)**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직률 또한 20.6%*로 높아 핵심인력 양성에 어려움 존재
- *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기업연합회
- ** 2016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 대기업·공기업 선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직이 저조**하여, 중견기업 취업 유인책으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필요

* 청년 취업층 선호 : 대기업 32.3%, 공기업 25.4%, 중견기업 13.3%, 중소기업 5.3% 順
(2016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전경련)

** 중견기업의 63.3%가 신규인력 확보에 애로(2017년 중견기업 고용현황실태 조사, 중견련)

- 2016년부터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고 중견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상향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도모하였으나, 기업 세제지원(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인정) 대상에서는 배제되어 중견기업의 활용유인이 낮음
-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허용 이후 단 9개 중견기업만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가입을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중견기업 평균 가입 근로자 수는 53명으로 중소기업 평균 가입 근로자 수(2.6명)에 비해 약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견기업의 제도 활용 유인 증가시 정책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내일채움공제 가입 현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합 계	
	기 업	근로자	기 업	근로자	기 업	근로자
수	11,174개	28,743명	9개	477명	11,183개	29,220명
비 중	99.9%	98.4%	0.1%	1.6%	100.0%	100.0%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8.3

- 중견기업 내일채움공제 활용 유인을 높여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세제지원 확대 필요

□ 건의내용

-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 (법인세법)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을 손금에 산입
 - (조 특 법)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 현 황

- 에너지절약형 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6%,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18.12.31까지)

☐ 문제점

- 전력소비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전력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

* 판매전력량 : ('14)47,759만MWh→('15)48,365만MWh→('16)49,704만MWh(한국전력통계)

- 이에, 국정과제(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등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할 계획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18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19년)

-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는 특히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최근 5년 전기 판매단가 인상률 : 산업용 7.4%, 주택용 : 0.9%(한국전력통계)

- '13년~'15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주된 투자 요인*은 “에너지비용부담 증가(43.1%)”로,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2.2%)에 비해 중소기업(47.2%) 및 중견기업(42.3%)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II)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6.9월

- 중견기업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심리를 제고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16년 축소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5%→3%)을 상향 개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과 시너지를 이뤄 정책 효율성 극대화 기대

* 정부는 '17년 조특법 개정(제118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몰 연장

□ 건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일몰연장) (현행) '18.12.31까지 ⇒ (건의) '21.12.31까지
 - (공 제 율) (현행) 3% ⇒ (건의) 5%

3.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

☐ 현 황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재활용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중소기업 10%,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18.12.31까지)

☐ 문제점

- 화평법 및 화관법 제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기업의 오염물질 관리 및 방지 시설 구축을 위한 환경보전시설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 최근 정부가 먼지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등 집중 감축안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17.9.26)”을 통해 '22년까지 산업부문 배출량의 43%를 감축할 계획을 밝혀 기업의 경영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환경 관련 컨설팅 및 자금 융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나,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의 애로 예상
- 환경 규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조 중견기업의 79.8%(1,238개사)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이며, 이 중 415개사는 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규모상 거의 차이가 없어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 2016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통계청

- 중견기업은 환경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조달조차 여의치 않아 이중고를 겪는 상황

* 중견기업의 20.8%가 환경시설 투자금 조달시 애로가 있다고 응답(중견련 내부자료, '16.10월)

-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공제율은 상향하고, 중견기업 공제율은 축소('12년)10%→('14년)5%→('17년)3%)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남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 보전이 아닌 국민의 생활안전 및 환경권 보장이므로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이 바람직함

□ 건의내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초기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일몰연장) (현행) '18.12.31까지 ⇒ (건의) '21.12.31까지
- (공 제 율) (현행) 3% ⇒ (건의) 5%

4.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현 황

- 중소 제조업체 및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18.12.31까지)

* (중소기업) '19.12.31까지 관세감면 적용하나, 관세감면을 30%로 축소
(중견기업) '18.12.31 관세감면 일몰 예정

☐ 문제점

- 최근 국내 제조기업은 노동·환경 규제 강화 및 환율변동·보호 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대내외 경영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제조 중견기업의 38.3%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 역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및 산업별 R&D 연계 등을 위한 중견 제조업 혁신성장 방안**을 추진 중

* 중견련 내부자료, '17.10월

** 중견기업 비전 2280, 산업부, '18.2.5

- 이처럼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 증가 및 제품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관세감면 신청기업의 대다수가 로봇, 제약 등 신산업을 영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 제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이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사용 제품과의 규격화 문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품질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高사양·高규격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불량률 상승 등 품질 유지에 애로
- 또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74.2%(23개)가 일본 수입품으로 FTA가 적용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기업 활용도가 높은 상황

※ (사례 A사)

-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을 영위중인 A사는 '17년 현격한 매출신장을 보이며 성장,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

* 평택공장 신축 투자 : ('17년) 208억원, 시스템 생산공장 증설 : ('18년~'20년) 987억원

구분	2015	2016	2017
매출액	2,303억원	2,511억원	3,71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	217억원	349억원
종사자수	530명	556명	599명

- 제품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이 미흡하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설비라인 규격화 및 수입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대다수의 설비를 일본 수입품으로 진행하여 제품생산 원가 절감 가능
- 제작공정에 필요한 5개 제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신청('17.7월)하였으며, '18년 예상 감면액은 10.5억원 규모로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건의내용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요청

- (일몰연장) (현행) '18.12.31까지 ⇒ (건의) '19.12.31까지
- (감 면 율) (현행) 50% ⇒ (건의) 30%(중소기업과 동일)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범위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현 황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투자, 근로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의 65%(투자를 제외할 경우 1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 부과('19.12.31까지)

☐ 문제점

-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혁신성장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 수립 및 대규모 투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라 내부 유보금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되어 투자심리 위축

- 설비투자를 진행한 중견기업의 평균 투자실적은 103억원*으로 이는 중견기업 평균 영업이익 92억원**을 상회

* 전체 중견기업 평균 설비투자실적 : 65억원, 투자실적 있는 기업 평균 설비투자 실적 : 103억원(2016년 기준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2016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통계청

- 중견기업은 자금조달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8.1%*로 높고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일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유보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초기 중견기업 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임

* 중견기업 자금조달원 : 내부 유보자금 68.1%, 시중은행 차입 23.2%, 정부정책자금 활용 2.5%, 회사채 발행 1.6% 순(2016년 기준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중견기업 매출규모별 자금조달원>

(단위 : %)

매출규모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펀드 등 투자유치	정책자금 활용	기타
1백억원 미만	77.6	9.1	0.5	0.1	1.1	1.7	0.9
1백억원~5백억원 미만	77.7	19.1	0.2	0.1	0.4	0.6	1.9
5백억원~1천억원 미만	66.0	26.4	1.2	0.0	1.2	2.7	2.5
1천억원~2천억원 미만	58.5	30.1	2.6	1.2	0.6	3.9	3.2
2천억원~3천억원 미만	63.3	27.1	2.6	0.4	0.3	4.4	2.0
3천억원~5천억원 미만	61.2	31.0	2.8	0.0	0.5	2.7	1.8
5천억원~1조원 미만	56.6	35.0	3.5	1.2	0.2	3.1	0.4
1조원 이상	44.1	35.4	6.8	0.0	0.0	5.7	7.9

* 2016년 기준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당기소득 차감항목 개선 등 제도 보완 필요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되면서 기존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배당을 제외
 - 기업의 배당은 내부 유보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함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
- * 기업소득환류세제('17.12.31까지 적용)의 경우, 배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소득에서 차감
- 또한, 신성장동력 투자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
 - 임금증가분 차감시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 50%, 청년 정규직 또는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 100%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투자에 대해서도 50% 가중치 반영 필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8~15%)보다 높은 공제율(25~40%)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 건의내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기 신성장동력 투자금액에 대해 가중치 적용
 - (현행) 투자×100% ⇒ (건의) 신성장동력투자×150%, 일반 투자×10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기 당기소득 차감범위에 배당금 포함
 - (현행) 배당금 제외 ⇒ (건의) 배당금×50%*

*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게 적용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현 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17.6.30 당시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인원에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18.12.31까지)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 문제점

- '17.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988만명)의 32.9%를 차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수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이 절실

* 경제활동인구조사, '17.8월

- 정부는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등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을 담은 국정과제(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17년 4분기 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분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중견기업의 고용안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중견기업 분기별 고용동향>

구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합계
	수	비중	수	비중	
2분기	243.9명	91.9%	21.5명	8.1%	265.4명
3분기	239.7명	87.9%	32.9명	12.1%	272.6명
4분기	232.3명	85.5%	39.4명	14.5%	271.7명

* 중견기업 분기별 고용동향조사, 중견련, 2017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크고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중견기업의 50.9%가 대졸 초임 3천만원 이상 기업으로 대졸 초임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비중(5%)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견기업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실태조사(2015, 제조업 기준)

□ 건의내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 연장
- (일몰연장) (현행) '18.12.31까지 ⇒ (건의) '21.12.31까지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전속고발제 폐지 신중 검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 현 황

-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검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4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를 도입('13.7.16)
-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고발권 행사실적*이 저조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요청이 커지고 있는 상황
 - * 의무고발제 도입 이후 고발요청건수는 총 15건(중기청 11건, 조달청 3건, 검찰총장 1건)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994) 검토보고, '17.2월)
-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 중
 -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국회 정무위, '17.2.15

☐ 문제점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경쟁제한성 판단 등 전문성이 결여된 형벌 부과, 악의적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민간단체에 대한 고발요청권 부여는 그 실효성이 적고 결정의 신뢰성, 단체의 대표성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 이익대변단체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고발요청권 부여는 불합리

□ 건의내용

- 전속고발권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은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시장경쟁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원용 법령상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세계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상호·순환 출자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매년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
 - * 지정 기준 변화 : ('87년) 4천억 → ('93년) 30대 기업 → ('02년) 2조원 → ('08년) 5조원 → ('16년) 10조원

<연도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상출집단수	32	40	43	53	61	78	30									43	49	51	55	59	62	79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4.1. (공기업포함)	16.4.1. (공기업제외)	17.5.1.	17.9.1.	18.5.1.										
상출집단수	48	53	55	63	62	63	61	65	53	31	-	32										
공시집단수										-	57	60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17.7.19) 부칙 제3조에 따라 '17.5.1 지정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17.7.19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간주됨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 '18.5.1

- 소수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에 일괄 적용함에 따라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 유발
- 이는 기업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건의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의 취지가 경제력 집중 억제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은 소수 재벌기업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예 : 상위 30대 기업집단 등

3.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완화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현 황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제한됨('17.7.1 시행)

* 자산요건 변화 : ('99년) 1백억원 → ('01년) 3백억원 → ('02년) 1천억원 → ('17년) 5천억원

- '17.1월 현재 전체 지주회사 193개 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0%를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17.11월

☐ 문제점

-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요건 상향은 규제완화가 아닌 역차별

-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견·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경영권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신사업 투자 활성화 등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 부채비율 제한(200%초과금지),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자회사 최소지분율 40%(상장회사 20%) 이상 유지,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등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 하더라도 세제상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의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 (일반법인에 비해 高率 인정)을 익금에 불산입토록 하여 법인세 감경 혜택 부여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법인)·양도소득세(개인)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으로 지주회사가 과점주주(50% 초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면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와의 매출액은 제외

□ 전의내용

-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자산기준 완화

4.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소수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 명목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관련 의원발의 법안 주요 내용>

발의의원	발의일	주요 내용
박찬대	'1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제한 강화(200%→100%) -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상향(20%→30%, 40%→50%) - 사업관련성 있는 손자(증손)회사만 보유 허용 -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채이배	'16.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제한 강화(200%→100%) -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상향(20%→30%, 40%→50%) - 사업관련성 있는 손자회사만 보유 허용 - 두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 지주비율 산정 기준 변경(자회사→계열회사) - 지주비율 평가방법 변경(장부가액→공정가치)
박용진	'17.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제한 강화(200%→100%) - 지분 의무 보유 비율 상향(20%→30%, 40%→50%) - 사업관련성 있는 손자회사만 보유 허용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존재하는데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 규제

*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는 상호출자금지,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17.11월 기준 일반지주회사 183개 중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 지주회사가 129개(70%)를 차지

* 공정위,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17.11월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

(단위 : 억 원, 개)

자산총액	1,000~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0	100,000 이상	합계
일반 지주회사	64	25	40	27	25	2	183
금융 지주회사	1	0	0	0	5	4	10
계	65	25	40	27	30	6	193
비중(%)	67.0%			14.4%	15.5%	3.1%	100.0%

-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9.0%,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8%(상장 41.0%, 비상장 83.0%), 80.7%(상장 43.6%, 비상장 82.6%)로 나타나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익이 없음

* 현행 법령상 부채 200% 초과 금지,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의무 규정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강화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 일관성이 결여됨

□ 건의내용

-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중견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규모 기업집단과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

5.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38조

□ 현 황

-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
 - * (규제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이 20%이상(상장 30%)인 계열사
 - * (규제행위) 정상적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행위,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 거래, 합리적 고려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제 적용 범위가 좁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됨

<사익편취 규제 강화 관련 의원발의 법안 주요 내용>

발의의원	발의일	주요 내용
김동철	'16.6.7	-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상장·비상장 10%)
제윤경	'16.7.13	-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상장 30%→20%) -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채이배	'16.8.5	-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상장 30%→20%) -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변경
이언주	'16.11.30	- 규율대상 지분율 변경(상장 30%→20%) -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 포함

* 공정위 보도자료,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 결과, '18.6.25

□ 문제점

- 현행 규정은 내부거래 목적의 동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 지분율이 요건에 해당하면 사익편취 목적의 거래로 의제하고 있어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큼
-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의 절감, 효율적 자원의 재분배, 거래중단위험의 감소,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속함
-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조세회피,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의 터널링* 의도가 없는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

* 터널링(tunneling) : 지배주주의 자기거래 등 부(富)의 이전행위

- 특히, 규제 대상이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17.4월)됨에 따라 중견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

* '18.5월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2개

□ 건의내용

-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목적이 아닌 내부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법령 : 상법 제409조, 제542조의7, 제542조의12

☐ 현 황

- 현행 상법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현황>

구 분	의결권 제한 대상
감사 선임·해임	- 모든 주주 개별 3% 제한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 그 외 주주 제한 없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모든 주주 개별 3% 제한(선임만 제한)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모든 주주 개별 3% 제한

☐ 문제점

- 주식을 3% 초과 보유한 주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는 것은 1주 1의결권(제369조)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상법상의 원칙

-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갖는 재산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배분청구권, 의결권, 대표소송청구권 등) 중 하나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감사 및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만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3% 수준의 군소주주가 연합하여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 우려

□ 건의내용

-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2.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재고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법령 : 상법 제542조의12

☐ 현 황

-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의결권 제한 없음)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의결권 3% 제한)하는 일괄선출방식을 채택
-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의결권 3% 제한)하는 분리선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 계류 중

☐ 문제점

- 분리선출방식에 의한 감사위원 선임은 선임 시부터 3% 룰이 적용되므로 대주주의 이사선임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임
 -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역차별 행위이며, 이는 주요국 사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 * 이견록,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쟁점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 감사위원 분리선출방식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집중투표제가 결합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
 - 외국계 투기자본이 ‘지분쪼개기’를 통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주회사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 자회사의 경영권까지 침해되는 상황 초래

※ (사례) 소버린 vs. SK

-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은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주주 측은 3%만 의결권 행사 (한경연 보도자료, '17.2.13)

☐ 건의내용

-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신중 검토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법령 : 상법 제382조의2

☐ 현 황

- 현행 상법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를 제외한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문제점

-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권익 증대효과 보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사례) 칼 아이칸 vs. KT&G

- 2006년 칼 아이칸은 헤지펀드와 연합하여 KT&G 주식 6.59%를 매입하고 KT&G의 집중투표제를 악용하여 헤지펀드 측 사외이사 1인을 이사회에 진출시킴
- 이후 칼 아이칸은 KT&G에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자회사(한국인삼공사) 정보공개 등을 요구
-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약 2조 8천억원을 투입하였고, 칼 아이칸은 주식 매각 차익 1,358억원과 배당금 124억원 등 총 1,482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떠남
- * 중앙일보, “집중투표제 도입땐 외국투기자본이 국내기업 이사회 장악”, '17.2.24

-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변자가 참여함에 따라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지연되어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해 영업상 기밀 등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상당함

□ 해외사례

- 미국은 1940년대 후반까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지만 경영권분쟁, 회사설립 기피 등으로 1950년대 이후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
 -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기업의 수가 적은 5개 주에서만 의무사항 유지
 - * 권재열, “집중투표제의 강행규정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제연구, 2003
- 일본은 '50년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발행주식 1/4 이상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의함)하였으나 주주 간 파벌싸움,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74년 기업 자율로 전환(일본 회사법 제342조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 *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제1463호) 검토보고, 2016

□ 건의내용

- 집중투표제는 현행법을 유지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경영권의 위협, 회사 주요 경영정보 유출, 효율적인 경영활동 저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중 검토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 황

-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모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문제점

- 별개의 법인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자회사 간 독립된 법인격 부인 및 경영간섭을 초래하여 독립적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외국계 투기자본이 경영개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송제기로 가격이 하락한 모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소 취하 등을 통해 단기 차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 기존 대표소송제도를 통해서도 자회사 이사에 대한 조사권 행사가 가능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해외사례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나 법원의 제소허가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독일, 프랑스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음

* 코스닥협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5

- 미국은 판례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모자회사 간 동일성이 인정되고 모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등 엄격한 소 제기 요건**을 규정(상장협·코스닥협·중견련,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 '17.2월)

* 모자회사 법인격이 형해화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동일하게 구성되거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 등

** 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할 것, ②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액의 20%를 초과할 것, ③ 외국자회사는 소제기 대상에서 제외

☐ 건의내용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중 검토

5. 서면·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법령 : 상법 제368조의3, 제368조의4

□ 현 황

- 현행 상법은 서면투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업이 실시 여부 선택이 가능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 등에 대해 서면·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국회 계류 중

□ 문제점

- 주식 보유의 목적이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참여 보다 단기 시세 차익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면·전자투표제 의무화가 주주의 참여 확대에 이어질지 의문
 - * 상장회사 주식 평균 보유기간('16년) : 코스닥 2.2개월, 코스피 4.9개월(한국거래소 주식회전율 보도자료 활용 : 상장협,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17.11월에서 재인용))
- 실제로 '16년~'17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사 및 행사 현황>

구 분	주식수 기준		주주수 기준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6년 3월	2017년 3월
전자투표 행사율	1.4%	2.1%	0.2%	0.2%
전자위임장 행사율	0.2%	0.1%	0.002%	0.002%
통합 행사율	1.6%	2.2%	0.2%	0.2%

* 한국에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통한 주총문화 선진화 지원”, '17.4월

- 서면·전자투표는 현장에서 의사진행 및 토의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해당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한 왜곡된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쟁점이 산재

*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제645호), '16.11월

□ 해외사례

- 전 세계적으로 인도, 대만, 터키 3개국만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하였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김진희,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KERI Brief, 2017

□ 건의내용

-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가 아닌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6.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법령 : 상법 제368조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상법상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
- 2017년 새도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총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실제로 '18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바 있음
 - * 감사·감사위원 선임 56개사, 정관변경 8개사, 재무제표 승인 4개사, 임원보수 승인 4개사, 이사 선임 4개사(금융위 보도자료, “2018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18.4.3)
- 특히,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행사는 발행주식총수 3%로 제한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더욱 어려움
 - 감사 선임을 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차 부결되는 상황 발생
 - * 한국경제, “임시 주총까지 열었지만... 상장사들, 감사 선임 실패 잇따라”, '18.6.20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수가 미달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가하락과 더불어 심각할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음

☐ 해외사례

- 주요국은 실제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소 찬성요건까지 규정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구 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보통결의	특별결의
한 국	X	O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출석과반수	출석 2/3
미 국 (RMBCA)	X	X	출석과반수	정관자치
일 본	△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정관배제 가능 ¹⁾)	출석 2/3 (정관으로 1/3 조정가능)
영 국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3/4
독 일	X	X	출석과반수	출석 3/4
프랑스	O (보통 1/5 참석) (특별 1/4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캐나다	O (과반수 참석)	X	출석과반수	출석 66.6%
호 주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출석 2/3
중 국	X	X	출석과반수	출석 2/3

※ X : 없음, O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 수 기준

1) 임원 선·해임의 경우 정관으로 1/3로 조정 가능, 완전배제 불가

*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 '17.2월

□ 전의내용

- 일정비율이상 찬성요건 폐지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7. 적대적 M&A 방어 장치 도입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적대적 M&A 공격시 기업의 방어 수단은 자사주 취득 외에는 거의 없음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98.2월),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폐지('98.5월) 등

-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M&A 위협 시 국내기업은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R&D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득 등에 불필요하게 소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 공격 사례>

연도	기업	펀드	주요 내용
1999	SK	타이거	- SK 지분 9.85% 확보 후 경영권 간섭 - 1년 만에 주식 전량 매각 6,300억원 시세차익 - SK, 경영권 방어에 2조원 투입
2003	SK	소버린	- SK 지분 14.99% 매입 후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 2년 3개월 만에 전량 매각, 1조원 이상의 차익 획득 - SK, 백기사 모집 등에 1조원 이상 투입
2004	삼성물산	헤르메스	- 삼성물산 지분 5% 매입 후 우선주 소각 등 요구 - 8개월 만에 주식 매각, 380억 원 이상의 차익 획득
2006	KT&G	칼 아이칸	- KT&G 지분 6.6% 매입 후 자회사 매각 등 요구 - 배당 확대, 주가 상승 등으로 1,500억 원 이상 차익 획득 - KT&G,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약 2조 8000억 원 투입
2015	삼성물산	엘리엇	-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140억 원 이익 획득
2016	삼성전자	엘리엇	- 삼성전자 분할, 나스닥 상장,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요구
2018	현대모비스	엘리엇	-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 반대

* 매일경제, “주가 오르면 ‘먹튀’ 한국기업 이번에도 당하나”, '18.4.4

* 중앙이코노미스트, “[외국 자본의 두 얼굴] 시세차익 챙기고 경영권까지 위협”, 1437호, 2018

□ 해외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황금주, 테뉴어보팅,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주요국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구분	주요 내용	근거 규정
미국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 - 뉴욕주 회사법 제501조 - NYSE 상장규정 제313조 및 보충서 제10조 - NASDAQ 주식시장규정 제5640조 및 해설서 제5640조
영국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영국 회사법 제284조
일본	- 정관에 따라 거부권부주식 발행 허용 - 단원주제도* 도입 *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 부여	- 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제8호, 제323조, 제188조 제1항
프랑스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다른 테뉴어보팅 제도 채택(opt-out 방식)	- 프랑스 상법 제L225-123조 - Florange Law 제7조

* 상장회사협의회, '18.6월

□ 건의내용

- 기업이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관련법령

- 중견기업특별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제3항

□ 현 황

- 현행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중견기업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에서 매출액 10% 이상이 발생한 기업은 배제되고 있음

□ 문제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성장의 롤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한양행, 아모레퍼시픽, 넥센타이어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임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제외되고 있어 입법취지와 맞지 않음
- 해외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존경받고 있는 기업들 또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음

* 머크(1668년 창업, 매출액 16조 9,000억원), 레고(1932년 창업, 5조 7,000억원), 허쉬(1894년 창업, 매출 6조 3,200억원) 등

- 현행 확인제도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① B2C기업의 경우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SSM에 납품하는 것이 불가피 하고, ②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가 대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③ 대기업 납품의 기준을 엄수하기 위하여 R&D 개발 등을 통해 혁신역량이 향상되고, 근로자의 처우가 대기업 기준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의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기업에게 세제, R&D등을 직접 지원하는 기존 사업들과 달리 해당 기업의 명예를 핵심적인 인센티브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정 대상을 3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행 중견기업 제외 조건인 대기업과의 매출액 비중 10% 제한 규정을 폐지 또는 매출비중 상향 조정(50~70%)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 현 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유지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70~100%를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사후관리요건 : ① 가업용 자산의 80%를 보유할 것, ② 주된 업종을 유지할 것,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근로자수 기준 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거나 상속 이후 10년간 평균 근로자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20%에 미달하지 않을 것

☐ 문제점

- 상속세법상 예외가 일부 인정되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종 및 투자대상 변경 금지로 기업 생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
- 특히, 우리나라는 '경공업→중공업→전자산업→IT산업'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업종전환에 실패하고 도태
 - 1955년 당시 10대 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이었으나, 1970년대 철강, 조선, 전자, 화학, 기계 등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삼호 무역, 동명목재 등 유력 기업이 사라짐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 장수기업 업종 전환 사례>

① 다나카 귀금속

- 1885년 전당포 및 환전소로 창업(금융)
- 전당포를 통해 얻은 금을 통해 귀금속 도소매업을 시작
- 20세기에 1g 순금을 두께 0.05mm선으로 3,000m까지 늘리는 금극세선 및 도금 기술 개발
- 이후 휴대폰 진동모터용 브러시 기술, 백금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제 등 개발
- 현재 전자전기부품 제조, 표면처리, 요업, 화학에너지, 환경 등 귀금속 가공 기술을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하여 매출액 9,256억 6,230만엔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② 후쿠다 금속

- 에도·메이지시대부터 병풍, 금사를 제조, 산업 근대화에 따라 담배 포장지 제조
- 1920년대 공업용 동박과 알루미늄박 제조
- 태평양 전쟁 이후 군수품 수요가 줄어들자 밀가루·옥수수가루 제조업으로 전환
- 1940년대 전해동박 기술 개발, 이후 1965년 도쿄올림픽시 컬러TV보급 수요 폭증
- 이후 금속분말을 사용한 전자파 차단 도료 등을 지속 개발하여 현재 전세계 휴대폰의 40%에 전해동박 공급, 매출액 527억 700만엔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영속성 확보를 입법목적으로 하나, 10년간 자산 80% 유지 및 업종전환을 제한 요건으로 하여 기업 생존을 저해하는 이율배반적 상황 초래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0년 내에 자산을 상당부분 처분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이 충족되는 이상 자산유지 요건의 탄력적 운용 필요

□ 건의내용

- 사후관리기간 및 요건 개선
 - (사후관리기간) (현행) 10년 ⇒ (건의)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여 기업 운영의 신축성 보장
 - * 독일 : 상속세의 85% 공제시 사후관리기간 5년, 100% 공제시 7년
 - 일본 : 사후관리기간 5년

- (사후관리요건) ① 업종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인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 하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혜택 유지, ② 가업을 승계 한다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처분한 자산을 다른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의무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 방식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 현 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유지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70~100%*를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추징율 : 사후관리요건 유지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 문제점

- 현행 제도는 사후관리요건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일 경우 상속세를 전혀 감액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6년 11개월을 유지하더라도 상속세의 100% 추징
 -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전액을 과세하며, 심지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조차 추징 대상에 포함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대 경영자는 기업의 업종이나 지분구조 등의 변경시 상속세 추징을 우려하여 기업경영 고착화·경직화 발생, 이는 기업성장을 저해하여 경제 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 또한, 후대 경영자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건의내용

-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유지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독일의 점감식 추징으로 전환

* 사후관리기간 기간 10년 중 5년 동안 유지한 경우, 50%를 추징

4. 가업승계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 현 황

- 상증세법에서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주식(상장, 비상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물납 요건 :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문제점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속세 납부를 금융재산으로 강제한다면 물려받은 주식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영권 방어가 어려움

* 상속세 관련 경영권 매각 사례 : 쓰리씨븐(세계1위 손톱깎이 제조 업체), 농우바이오(종자기술 보유), 락앤락(밀폐용기 제조) 등

-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으로 우선 상속세를 납부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는 현행 법 제도하에서는 상속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권의 포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부(富)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의내용

- 상속인의 자금 유동성을 일정부분 담보해 주기 위하여 금융재산 우선 소진 후 물납을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금융재산 일정비율* 이상 상속세를 납부하면 물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마련

* 예 : 금융재산 80% 이상 등

5. 중소·중견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현 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

<기업규모별 할증평가율>

구 분	중소기업	이 외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문제점

-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와 최대 할증률 30%까지 감안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
- 부모로부터 받은 사업용 자산·주식의 최대 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계는 불가능에 가까움
 - 경영권을 승계시, 최고 65%의 상속세를 낼 경우 창업주의 지분 100%는 3세대에 가서는 10%로 급감
- 비상장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안경봉·홍순기,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6, 2013

- 이미 과대평가된 주식에 할증평가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이중할증 문제
- 대다수 기업은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음
 - * 중소기업(1,879개사) 조사결과 48.6%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자산이 부족하다고 응답 (상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 의원 검토보고서, '15.10월)
- 상장기업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된 상증법상 평가액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승계 후 최대주주 지분을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우려
- 현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만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중견기업이 제외되고 있으며, 한시적인 규정이라는 문제가 존재함

□ 건의내용

-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과세특례기간을 영구화 하는 방안 도입